

1999년 경제 정세

일반대중이 배제되고 희생양이 되는 구조조정이라면 설사 그 구조조정이 임시적인 응급대처를 통해 단기간 활기를 띠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막대한 구조조정의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면 다소 힘들고 더디더라도 대다수 일반대중의 삶의 안정이 보장되는 그러한 구조조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병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박규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 세계경제 전망

1990년대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범세계화의 거센 파고가 자본주의를 강타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파고는 1990년대 하반기에 들어 일정하게 굴절을 겪는데, 1998년이 그 해로 기록될 수 있다. 1998년 세계경제는 초두부터 동아시아의 환율 폭락과 그에 따른 여파의 확산으로 특 징지워지면서 세계적인 대공황이 회자되기도 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1999년 역시도 전반적인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각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불균등하게 되는 추세 속에 놓여 있다.

[표1] OECD의 세계경제 전망개요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

지역	94	95	96	97	98	99	2000
미국	3.5	2.0	3.4	3.9	3.5	1.5	2.2
일본	0.6	1.5	3.9	0.8	-2.6	0.2	0.7
유로지역	2.9	2.5	1.7	2.7	2.9	2.5	2.7
OECD평균	3.1	2.5	3.0	3.1	2.2	1.7	2.3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IMF, World economic Outlook



11.17 알라미다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 회담에 참가한 최봉국 정상들.

여기에서는 1998년 세계경제에 대한 간략한 묘사를 기반으로 하여 1999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혼란에 빠진 1998년의 세계경제

우선 1998년은 1990년대 무기적인 단기유동자본의 활성화가 세계경제의 질서를 본격적으로 혼란에 빠뜨렸던 시기이다. 1990년대 고수익을 쫓아 전세계를 떠돌던 단기유동자본은 헷지펀드(hedge fund)를 필두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및 시장 개방화와 결합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과잉생산을 이끌어 왔다. 동아시아지역이 그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과잉생산이 이들 지역의 경제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단기유동자본은 급격하게 유출되기 시작했고 단기유동자본의 유출에 따른 환율 급변동이 경제시스템 불안정성을 심화하면서

현상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부터 기인한 경제위기가 러시아, 중남미로 이어지면서 확산되면서 기존의 개발도상국 경제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양상이 주요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반기 이후는 이러한 경제위기의 확산 진정을 도모하는 실정이다. 결국 1998년 하반기는 경제위기의 확산은 일정 정도 진정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상태를 밝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3극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선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시작한 장기불황 하에서 경기침체가 내재화되어 있고 경기침체의 내재화는 금융권의 취약성 제고와 누적적인 재정적자로 표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대 이후 금융권의 주요한 대

출처였던 동아시아가 붕괴에 따라 금융권의 취약성은 일층 제고되고 불황의 정도는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누적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경기부양책과 금융권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사회주의권 붕괴에 기인한 냉전해소를 기반으로 하고 지속적인 자본유입과 금융권의 높은 경쟁력을 통해서 미국경제는 19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위기가 극으로 치달는 시기에 수출은 3분기 연속해서 감소하였고 교역재산업이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국내수요에 의해 흡수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1998년 들어 장기간 지속되는 미국경제 역시 그 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는 게 사실이고 세계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화에 따라 러시아 경제위기가 발발한 이후에는 추가하락,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펀드의 투자손실 발생 등으로 금융권의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취약성이 가시화되고 국내수요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이후 미국은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대한 집단적인 개입을 유도하면서 국내적으로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통해 완만한 금리

1998년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중남미로 확산하는 등 투기적 단계 자본이 낳은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미/일 금융기관의 취약화에 따른 국제적 신용경색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인하를 행하여 경기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기연착륙을 노리면서 지속적인 자본유입을 추구하는 미국과 전면적인 경기회복을 노리면서 누적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가일층 악화시키는 일본으로서 는 입장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에도 성장률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었고 1999년 유로화의 출범은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서 미국 및 일본과 다른 입장을 가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8년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중남미로 확산하는 등 투기적 단계자본이 낳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미/일 금융기관의 취약화에 따른 국제적 신용경색의 시기로 볼 수 있다.

2) 1999년: 단기자본 운동과 미일의 갈등

199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전후의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각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석유위기를 계기로 생산성의 급격한 둔화를 겪었던 1970년대 초반의 전반적인 불황과 비교될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조차 전반적인 불황이 논의되고 있고 국제금융질서의 재구축시도가 표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국면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3국간에 그 영향력이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이고, 이런 점에 서 공동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로운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국제금융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는 이러한 갈등과 함께 1999년 들어 출범하게 될 유로통화

[표2] 세계경제의 침체국면: 실질GDP성장률 추이 (%)

지역	1974	1975	1981	1982	1990	1991	1998
세계경제	2.4	1.4	1.5	0.4	2.7	1.7	1.6
선진국	0.7	-0.1	1.4	-0.3	2.1	1.1	1.8
미국	-0.6	-0.8	1.8	-2.2	0.8	-1.0	3.3
개도국	5.9	4.5	1.7	1.7	3.6	3.9	0.7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과거 경기침체국면은 석유가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축정책 등을 수반하고 있었으나, 1998년 이래의 상황은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의 위협이 보이고 있으며, 시장이자율은 기록적인 최저 수준 근처에 머물면서 각국간 경기순환이 수렴하지 않는 등 색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1999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우선은 전술한 추세처럼 세계적인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주요국의 협조적인 금리인하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와 함께 국제금융의 새로운 규제방식을 대한 모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문제는 전술한 것처럼 각국의 사정이 다르고 불황추세 하에서 이들간의 가속화된 경쟁이 전면적인 공동금리인하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간 정책협조를 이루어 내는 데에는 미국과 일본의 갈등양상이 문제가 된다. 또한 국제금융의 새

를 둘러싼 기축통화 쟁탈전과 이들 둘러싼 단기자본의 이동에 의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는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운동과 이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다.

2. 한국경제 전망

1) 한국경제의 문제점

지금 한국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소위 구조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당연히 구조조정의 성패는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전망할 때, 그 핵심고리는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금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안팎의 사정들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① 한국경제 성장 메커니즘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그 성장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정부는 경제운용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특히, 자금)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② 정부의 경제운용의 요점은 수출증대를 통한 고성장이었다. ③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몇 개의 전략산업이 선택되고 이들 분야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집행되었다. ④ 거액의 설비투자자금은 외부차입의 형태로 조달되었다. 이는 공업화 초기 민간기업의 자본축적이 미미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⑤ 이들 대규모 투자는 해외시장의 호의적인 여건 등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고차입 → 고투자 → 고수출 이 지난 30년간 한국경제의 고성장을 유지해 온 기본 메커니즘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GDP를

고차입 → 고투자 → 고수출 이 지난 30년간 한국경제의 고성장을 유지해 온 기본 메커니즘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GDP를 구성하는 주요 4개 항목의 1970~97년간중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성하는 주요 4개 항목의 1970~97년간중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경제의 모순

한국경제의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은 다른 한편에서는 그 내부에 몇 가지 모순을 키워왔다. ① 국내투자 와 외국시장간의 지속적인 긴장의 확대다.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한국의 공격적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투자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결과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생산능력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기업의 투자"와 "외국시장"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성장패턴은 성공할 경우 고성장이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심각한 후퇴를 피할 수 없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이 심한 기복을 보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90

[표3] GDP 구성 주요 항목 연평균 증가율

	수출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정부지출	민간소비
1970~97 연평균 증가율	25%	23%	21%	19%
1997년 현재 GDP 구성비**	38%	35%	11%	53%

*출처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8

** GDP 구성항목중 수입을 제외한 수치임. 수입을 감안할 경우 1997년의 순수출은 거의 0에 가까움

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한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일부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통제요구 등을 통해 이 같은 성장패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견제와 압력이 강화되어 왔다.

② 투자와 외부차입간의 긴장관계도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즉, 지금과 같은 성장패턴 하에서는 기술경쟁력이 없는 한국은 "규모의 경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업들이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에 매달리는 이상, 이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자금(수익이나 혹은 증자 등)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투자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부차입(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200%만 되도 높다고 경계하는 부채비율이 한국의 30대기업은 평균 5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그 비율이 1000%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높은 부채비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항상 순조로워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즉, '채무조달 → 채무를 통한 재무상환 → 추가적인 채무조달'의 패턴이 원활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벌의 금융독점이 심화되면 될수록 역설적으로 국내금융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여지는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 채벌들이 금융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

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채벌들이 금융업 개방, 즉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인수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외국은행이 채벌의 주거래은행이 될 경우 지금과 같은 높은 부채비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므로써 외부차입을 둘러싼 긴장은 결과적으로 한층 고조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IMF 사태를 초래하게 된 화근이 된다.

③ 공업화 초기, 일정 정도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던 정부는 경제가 급속히 성장 확대되면서, 특히 3저 호황 이후 민간부문이 급격히 비대화하면서 그 지위와 역할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운용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자본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한편 한보사태 등을 통해 정부개입의 치명적 치부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2) 한국경제의 '세계화'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는 OECD가입과 뒤이은 금융시장의 개방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축적패턴에 내재된 모순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영삼 정권 시기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주식시장, 대출시장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자본의 참여가 대



3차선 도로를 점유한 서울의 노점상들. 대방 실업시대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폭적으로 허용되고 실제로 이들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표4] 자본수지 추이 (억달러)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1-8
자본수지	66	27	103	168	233	13	7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4년을 경계로 외국 금융자본은 엄청난 속도로 밀려 들어왔다. 94년에서 96년 사이에 무려 순유입 기준으로 500억달러가 넘는 외국자본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들 자본의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정부나 자본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 8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 증폭부자로 인한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기업들의 채무가 국내 자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사실상 부도 직전인 경우에도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채무유예나 특별성 특용 등을 통해 기업의 채무부담을 덜어주었다. 정확히 말해 앞서 지적한 채무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개입하였다. 물론 이러한 특혜는 정부가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이로 인한 비용은 통화증발을 통해 결국 일반대중의 부담으로 귀착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경제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온 국제금융자본은 관치금융의 울타리밖에 있는 자본이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기업의 부실징후가 노골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투자전략에 입각하여 수시로 자본을 이

동시키는 그런 자본이다. 즉, 국제금융자본은 한국기업의 채무순환에 끼여들지마자 그 악한 고리가 되었다. 그리고 주지 하디시피 97년 중 홍콩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불안 및 기아사태 등 국내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금융자본은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자금을 빼가

기 시작한다. 이 시기 자본수지의 변동을 보면 주식시장 등의 증권투자자금은 꾸준히 유입되었으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대출 등이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상환 압박에 몰렸으며(유동성 위기), 이는 결국 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가져왔던 것이다.

3) 1998년의 한국경제

IMF 구제금융과 함께 경제운용의 주도권은 정부도 자본도 아닌 외국자본과 그 대리인인 국제기구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축적패턴에 대한 문제제기가 구조조정 압력이라는 형태로 제기되었다.

먼저, 국제금융자본의 자본회수 움직임은 국내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을 압박하여 국내기업들을 지탱해온 채무순환은 사실상 정지되었다. 98년 상반기 동안 5대기업은 약 7조 3천억 원을 외화 빚을 갚는데 썼다. 또한 국내금융기관들은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금공급여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여기에 5개은행의 퇴출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금융권은 심리적으로도 얼어붙었다.

재벌구조에 대한 압력도 안팎에서 제기되었다. 그 요점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잉투자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이다. 재벌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해외시장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외국자본과 그 동안 국내자본의 도전에 직면해 그 권위를 크게 훼손당한 국내 판료 및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그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재벌간 빅딜의 지지부진에서 나타나듯이 재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IMF 사태를 계기로 국내 자본의 축적패턴에는 일정 정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와 같이 대규모 외부차입에 의존한 공격적인 투자확대는 적어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에 대해서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외국자본과 정부에 의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국내대자본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특히 국내경제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확대되고 구제금융 등을 고리로 외국의 간섭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가 과거와 같이 경제분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기획 및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형태로든 그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안팎의 충격에 대한 한국경제의 완충능력은 상당 부분 후퇴할 전망이다.

이처럼 직접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의 한 축인 금융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동시에 여타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여파로 98년 국내경제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98년 중 투자는 전년에 비해 무려 40% 이상이나 줄었다. 98년 1~9월 중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나 줄었으며, 공장가동율은 60%대로 떨어졌다. 수출은 원화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외견상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10월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가 감소하였다. 특히 2%대에 머물던 실업률은 7%대를 넘어섰으며,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4-5년 정도 후퇴하는 참담한 상황에 몰려있다.

4) 비판적인 1999년 경제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 지은 후, 비록 기업구조조정이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계기로 99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99년 역시 한국경제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볼

한국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을 계기로 99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99년 역시 한국경제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당분간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때, 당분간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① 투자 위축

먼저, 투자는 내년에도 재벌을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채무상환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기 때

문에 그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투자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내 기계수주는 98년 1~9월 중 전년동기대비 36.2%나 감소하였으며, 기계류 수입액 역시 같은 기간 중 55.3%나 감소하였다. 산업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80%가 내년에도 설비투자를 줄이거나 지금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9%만이 설비투자를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민간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그 감소폭은 약 10~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② 소비 위축

민간소비 역시 그 전망은 비관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로 내수진작을 꼽고 있으나, 언제 마무리될

지 모를 구조조정이 곧바로 정리해고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일반대중의 소비심리가 쉽사리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부나 재벌 등 상층부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 중산층과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등이 가공할만한 규모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일반대중의 소비심리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사상 유례 없는 고용불안의 확산은 대중들로 하여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소득의 감소보다 소비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소비의 위축은 단지 노동자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인 역시 경기불황으로 영업을 부진한 상황에서 퇴직자의 일부가 자영업에 참여하여 제한된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계층에서도 중산층의 몰락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③ 수출감소

사실 국내경제에서는 경기회복의 견인차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수출에 대한 집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내년도 최우선정책도 수출의 확대다. 그러나 수출의 선행지표라고

하는 신용장내도액이 98년 10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출전망도 정부나 기업들이 기대하는 만큼 밝지 못하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미국경기의 회복과 함께 수출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그것은 성급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경기후퇴를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이 위기타개의 돌파구로 자국에 대한 수출확대에 치중하는 것에 경계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한국은 방문한 미국의 상무장관이 올해가 금융위기의 해였다면 내년은 무역위기의 해라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만약 미국 등에 대한 수출회복이 여의치 않다면, 대미수출의 확대를 통한 여타 아시아제국의 경기회복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경제의 전체적인 수출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내년도 우리경제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래도 2%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내보이고 있으나, 여기에 쉽사리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설사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장이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왜냐하면 모든 낙관적 전망의 배후에는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생긴 투자의 공백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로 메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리해고의 자유가 이미 상당 수준 보장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④ 구조 개혁의 정체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대다수 일반대중을 배제한 채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야합으로 또 다른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성장패턴의 구축으로 귀결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최근 구조조정은 일반대중의 의사는 전혀 끼여들 여지도 없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을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과 관료는 IMF를 계기로 경제부문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하려고 하는 한편, 수세에 몰린 재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위기를 틈타 이 참에 한국에서 기반을 구축하려는 외국자본도 이해다툼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세력은 그들의 이해가 쉽게 맞아떨어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은 강도높게 추진하면서 정부개혁, 재벌개혁, 외국자본의 통제 등에 대해서

는 일종의 야합을 통해 유아무야 할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경제위기는 결코 용이하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편다고는 하나, 일반대중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공급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결국 도로(徒勞)로 끝날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일반대중의 경제(經濟)하려는 의지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대중이 경제개혁과 새로 구축되는 경제시스템에서 그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다수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일반대중이 배제되고 희생양이 되는 구조조정이라면 설사 그 구조조정이 임시적인 응급대처를 통해 단기간 활기를 띠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굳이 멕시코의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어차피 막대한 구조조정의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면 다소 힘들고 더디더라도 대다수 일반대중의 삶의 안정이 보장되는 그러한 구조조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